

- (1) ①②③은 뉴밀레니엄행정학 등 기존의 문헌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⑤의 경우 일선관료제이론은 일선관료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현대적·상향적 정책집행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④의 경우 일선관료들의 현실은 만성적인 시간부족과 인적·물적자원 부족으로 무리한 정형화를 시도한 나머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일선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본다. 답 ④
- (2) 매트릭스조직의 장점으로는 i)전문지식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ii)의사전달의 활성화와 조직의 유연화 iii)구성원의 능력발전, 동기유발, 책임이행 촉진 iv)관료제 병리현상 감소 등이며, 단점으로는 i)이중적 구조로 인한 역할갈등 및 조정곤란 ii)기능관리자와 프로젝트관리자간 권력투쟁 및 갈등 iii)불안정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유발 등이다. 매트릭스조직은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②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답 ②
- (3) ③의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에 예결위의 종합심사로 이어진다. 답 ③
- (4) 감축관리는 생산성을 중시하였지만 정부기능이나 인력 감축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만을 중시한 나머지,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 등에 의한 생산성 제고 측면은 오히려 소홀히 한 점이 있다. 답 ⑤
- (5) 주인-대리인이론의 핵심은 대리손실(Agency Loss)이며, 정보격차에 의한 대리손실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답 ②
- (6) 개방형직위는 공직외부에서 임용될 경우 계약직으로 임용하지만 공직내부에서 임용될 경우 재직자가 희망시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임용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뉴밀레니엄행정학 p.756) 답 ③
- (7)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자 조직형성의 이유라고 보는데 거래비용에는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중 사전적 거래비용이란 계약이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이론은 거래비용차원에서 시장과 관료제조직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시장이 단일중추의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라면, 시장실패를

-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회색,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적 요인(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과 환경적 요인(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불완전경쟁)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에다 자산의 특정성(자산의 이전불가능성) 및 정보의 편재성(정보격차)의 특수한 결합이 시장을 통한 거래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내부조직(관료제)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의 특정성 또는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으로서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굳이 다른 조직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므로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②는 사전적 거래비용이 아니라 사후적인 거래관계유지비용에 해당한다. 답 ②
- (8) 네트워크조직은 자신의 조직은 핵심적인 전략기능 위주로 합리적으로 편제하고 여타의 부수적 기능은 주변의 다른 조직들의 자원을 집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조직이다. 답 ④
- (9) 구조조정이나 감원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시 법적으로는 직권면직조치를 취한다. 답 ④
- (10)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요소로 나누어 회계계리를 실시하므로 부채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답 ③
- (11) 답 ①
- (12) 승진기준으로서 선임순위란 처음 공무원에 임용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시기를 말한다. 답 ②
- (13) 기획예산처는 중앙예산기구이며 국고수지총괄기구는 재정경제부이다. 국고수지총괄기관이란 국가의 세입, 회계, 결산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답 ⑤
- (14) 첨단행정학 p.559 문24와 동일 (뉴밀레니엄행정학 p.845) 답 ②
- (15) ④는 Maslow의 욕구5단계설을 토대로 하는 ‘내용이론’에 속한다. 답 ④
- (16) 대국민홍보업무는 혼선을 막기 위하여 일원화된 창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답 ②

- (17) 오우치의 Z이론은 비공식적·암시적 통제를 선호한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 445) 답 ②
- (18) 파킨슨의 법칙은 전쟁 등 위기상황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 52) 답 ④
- (19) 재정진단제도는 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행의 재정운영진단의 절차는 재정보고서 → 작성지침의 시달단계 → 재정보고서 분석단계 → 재정진단 실시단계의 선정단계 → 재정진단 실시단계 → 재정진단결과의 조치단계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 과다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지방재정진단제도이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승인제도 등은 지방재정사전관리 시스템이다. 답 ④
- (20)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나 유도발전(발전행정론의 국가발전전략)은 정부기능의 팽창을 초래하여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답 ②
- (21) 답 ①
- (22) 계속비단 완성에 있어서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주는 것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제도가 사실상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장기계속계약제도는 단년도예산이 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예산의 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계약제도로서, 1975년 예산회계법에 도입되었다가 이후 ‘국가를당사자로서의 계약에관한법률’로 이관되었다.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장점은 ① 계속비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②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자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의 부

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제도는 ①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위험대가(risk premium) 지출을 초래,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한 매년 중복심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유발, ③ 분산투자로 인한 공기의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윤건영·황성현·박재환, 2001).

총사업비제도란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용어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국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완성에 2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토목사업 500억, 건축사업 200억)이상인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변경시에도 마찬가지). 대상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항만, 댐, 상하수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편성단계에서 총액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계상예산사업’도 추정사업비가 위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에 포함된다.

총액계상예산제도란 정부예산은 원래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규모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총액계상예산이라고 한다(1994년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 편성단계에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한 경우 집행단계에서 사업 주관부처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세부사업을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상사업은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농업용수개발, 하천치수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제도와는 다르다.

답 ②④ (복수)

- (23) 가용예산 200억원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6인 C-3까지이다. 따라서 이 범주 내에 들어있는 채택가능한 사업규모를 사업별로 종합해 보면, A사업은 A-1으로써 50억, B사업은 B-1, B-2로써 90억, C사업은 C-1, C-3으로써 60억이다. 답 ③
- (24) 흔히 복식부기 = 발생주의, 단식부기 = 현금주의

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주로 발생주의 하에서는 복식부기를 취하지만 복식부기하에서도 현금주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회계계리의 방법에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그리고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두가지 구분이 있다. 발생주의/현금주의의 구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의 문제이며, 복식부기/단식부기의 문제는 회계계리의 방식 즉, 거래의 이중성(차변과 대변)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상호 별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생주의하에서는 복식부기가, 현금주의하에서는 단식부기가 각각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생주의에서도 단식부기를, 현금주의에서도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현금주의를 취하면서도 복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①의 경우 연결방식이란 관련된 조직간에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내부거래를 상호 제거하여 통합적으로 작성하는 계리방식을 말한다. ⑤의 경우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핵심인데,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인 재정보고서에 해당 하는 반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파악하는 '동태적'인 재정보고서에 해당한다. 답 ②

- (25)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하여 사회총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사회총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점증모형은 대안(수단)의 범위에 따라 목표가 조정될 수도 있지만 대안을 먼저 선택하고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목표를 먼저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답 ①
- (26) 하위정부모형은 의회의 기능이나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의회기능과 이익집단이 활성화된 미국에 주로 적용되었던 개념이다(뉴밀레니엄행정학 p.282) 답 ④
- (27)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 집행을 둘러싼 과정에서 형평성 등 재분배의 기준을 놓고 사회주의(수직적공평)와 자유주의(수평적공평)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제로섬게임을 하지 않으므로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작고 따라서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별로 없어서 추진이 용이한 반면,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자와 이익향수자간 치열한 제로섬게임을 하므로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크고 따라서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커서 대체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강의보충프린트). 답 ③

- (28) 정책텔파이는 컴퓨터를 통해서 통계적·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지만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미래예측기법이다. 답 ④
- (29) 답 ②
- (30) 답 ③
- (31) Y.Dror는 최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여러 국면들(초정책결정, 본래의미의 정책결정, 후정책결정)이 서로 중첩적이고 가외적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정책결정구조의 중첩성이 정책결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결정의 최적수준을 보장해 준다고 보고 있다. 답 ④
- (32) 원초적상태는 Rawls가 '정의'개념을 도출한 가상적 장치로서 이는 신행정학자가 중시한 공정성 즉,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답 ③
- (33) Diesing은 합리성을 경제적합리성, 사회적합리성, 법적합리성, 정치적합리성, 기술적합리성으로 구분하고 이중 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체제구성요소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말하며 사회적 합리성이 가장 비합리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하였다. ③의 경우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이란 사회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수단적 합리성을 말하므로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위에서 성립되는데, 다만 합리모형의 경우 합리성을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지만,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며 부분적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①은 합리성의 일반적인 두가지 견해 중 점증모형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서 틀린 말이 아니다(박성복외, 정책학원론, 333쪽, 뉴밀레니엄행정학 등). 답 ③
- (34) 논리실증주의는 철학에다가 과학적 세계관을 도입한 비엔나학파(Vienna School)의 철학적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행태과학은 이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④의 경우 행태과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가치가 배제된 사실이며 인간의 내면세계가 아닌 외면적 행태이지만, '행태(behaviour)'라는 말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 태도, 신념체계, 행동양식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선행정학 p.81) 답 ④
- (35) 공공선택론은 Wilson과 달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관료도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단일

의 의사결정중추에 의한 계층제적 통제가 아닌 관할구역의 중첩이나 의사결정권한의 분산 및 다원적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답 ③

- (36) 준예산은 사전승인원칙의 예외이며, 여태까지 한번도 실제 활용된 적이 없었고,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 등의 잠정예산과 다르며, 가예산은 우리나라 제1공화국때 채택했던 제도이다. 답 ②
- (37) ①의 경우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을 결정의 기준이며, ②의 경우 비용과 편익은 당해 투자대상만의 편익과 비용만이 아니고 당해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이다. ④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며 ⑤의 경우 조편익(총편익)이 아니라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미래가치가 아닌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답 ③
- (38) 소방사무 및 쓰레기수거(청소)사무는 자치사무이며, 조세 및 수수료 등 공과금징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73~74)
답 ④
- (39) 여기서 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의 뉴거버넌스를 지칭하며 신공공관리란 1980년대의 거버넌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모두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답 ⑤
- (40) 국민고충처리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신청에 의한 조사 및 사후구제수단이다. 답 ①